



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 tel 02.3270.7381 fax 02.3270.7432 [발행일] 2016.2.15 문서번호 : 2016-498

산재·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 설명회 (2월 23일)	<p>가. 일 시 : 2015년 2월 23일(화) 15:00 ~ 17:30</p> <p>나. 장 소 : 경총회관 5층 대강의실(지하철 6호선 대흥역 4번 출구)</p> <p>다. 강 사 : 근로복지공단 김영수 차장(보험재정국 고용정보관리부)</p> <p>라. 내 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5:00 ~ 17:00 : 산재·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 실무 ○ 17:00 ~ 17:30 : 질의응답 <p>※ 공문 및 참가신청서 별도 기송부(경총플라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)</p>
---	--

정부·국회 동향 등

- 화재, 무너짐 등 재해유형별 작성예시 기술
- 고용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el.go.kr>)에서 확인 가능

◆ 정부,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」 국무회의 의결 (2월 11일)

- 주요 내용
 - 안전·보건교육 실시 사업장 확대(안 별표 1)
 -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도매·숙박·음식점업 근로자
 -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확대(안 별표 3)
 -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유해·위험방지 계획서 제출대상 공사현장
 - 안전검사 대상 유해·위험기계 추가(안 제28조의6)
 - 이동식 크레인, 고소작업대

◆ 고용부, 「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모범사례」 홈페이지 게시 (2월 4일)

- 주요 내용
 - 제조업, 건설업, 서비스업 등 업종별 작성예시 기술

◆ 안전공단, 「2016년 측정 및 특검 비용지원사업 자문 회의」 개최 (2월 4일)

- 안전보건공단은 '2016년 측정 및 특검 비용지원사업 자문회의'를 개최함.
 - 일시 및 장소 : 24(목) 16시/공단 서울북부지사 회의실
 - 안건 : 2016년도 측정 및 특검 비용지원 수가결정 및 효율적인 사업수행 방안 등
- 본회 김형현 전문위원이 참석함.

◆ 근로복지공단 「제26차 산재심사위 심의회의」 개최 (2월 11일)

- 근로복지공단은 '제26차 산재심사위원회 심의회의'를 개최함.
 - 일시 및 장소 : 2.11(목) 14시/위원회 제1회의실
 - 안건 : 심사 청구사건 30건
- 본회 임우택 본부장이 참석함.

◆ 안전공단, 「2016년도 공단 온라인매체 홍보영역 제안서 심사회의」 개최 예정 (2월 17일)

- 안전보건공단은 '2016년도 공단 온라인매체 홍보영역 제안서 심사회의'를 개최할 예정입니다.
 - 일시 및 장소 : 2.17(수) 14시/공단 중부지역본부 회의실
 - 안건 : 온라인매체 홍보영역 제안공모 심사
- 본회 임우택 본부장이 참석할 예정입니다.

◆ 근로복지공단, 「제29차 산재심사위 심의회의」 개최 예정 (2월 17일)

- 근로복지공단은 '제29차 산재심사위원회 심의회의'를 개최할 예정입니다.
 - 일시 및 장소 : 2.17(수) 14시/위원회 제1회의실
 - 안건 : 심사 청구사건 30건
- 본회 전승태 팀장이 참석할 예정입니다.

노사 동향

◆ 한국노총, 「파견법 개정은 산재사고 발생 확대법 될 것」 성명 발표 (2월 5일)

- 한국노총은 '파견법 개정은 산재사고 발생 확대법 될 것' 성명을 발표함.
- <주요내용>
- 하청노동자들이 산재 사고를 당할 때마다 노동부는 작업환경측정, 작업 중지, 임시건강진단 명령 등의 조치를 반복하고 있으나 산재사고는 줄지 않고 있음.
- 근본적인 해결책은 놔둔 채 이러한 조치만 취하는 것은 미래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며, 대통령이 오히려 이러한 불법파견을 법 개정으로 합법화 해주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임.
- 파견법이 개악되면 지금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관리감독이 얼마나 더 취약해질지 볼 보듯 뻔

하며, 파견법 개정은 산재사고 발생 확대법이 될 것이므로 국회통과 저지에 최선을 다할 것임.

◆ 민주노총·노동건강연대 등, 「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촉구」 공동성명 발표 (2월 12일)

- 민주노총·노동건강연대·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는 '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 촉구' 공동성명을 발표함.
- <주요내용>
-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터미널 창고 화재, 요양병원 화재, 공연 중 환풍구 사고, 아파트 화재, 지하철 사고 등 끊임없이 재해가 발생하고 있음.
-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인 정부의 규제완화에 지적 없이 모든 사고 책임을 현장의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함.
- 반복되는 사고의 원인은 안전업무의 외주화, 안전 관련 인력부족 때문이며, 우리도 안전에 대한 의무를 방기한 기업과 정부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함.

언론 동향

◆ “산재보험금 받게 해줄게”...2억원 뜯어낸 병원 사무장 징역 4년 (머니투데이, 2월 10일)

- 서울중앙지법은 병원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병세가 완치된 환자들에게 사례금을 받고 장해보험금을 타내게 해 준 병원 사무장 A씨(42)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함.
- A씨는 장해진단을 받지 못한 환자들을 상대로 “장해가 없더라도 산재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”고 접근한 뒤 사례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됨.
- A씨는 병원 의사들 명의로 장해진단서와 소견서 등을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주는 대가로 총 2억 30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남.

- 재판부는 “A씨가 장애인단을 받지 못한 환자에게 먼저 접근해 금품을 요구한 사정이 엇보이는 점, 범행이 수년에 걸쳐 반복됐고 피해액이 큰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”고 양형 이유를 밝힘.

◆ **달라진 대법 “스트레스로 목숨 끊어도 산재”**
(경향신문, 2월 14일)

- 대법원 1부(주심 고영한 대법관)는 자살한 콘도업체 관리직 A씨 유족이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냄.
- 관리직이었던 A씨는 회사 주인이 바뀌며 객실부로 발령,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팀장 밑에서 500여 객실의 시설물 점검을 하며 사무실이나 책상도 없이 근무함.
- A씨는 고객에게 위치가 안 좋은 방을 배정해줬다며 항의와 욕설을 들은 뒤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으며, 1·2심은 꼼꼼하고 예민한 성격으로 인한 개인적 사유의 사망이라고 판결함.
- 그러나 대법원은 “갑작스러운 사무 변경과 상사와의 마찰, 심한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건에 직면했고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유발된 것으로 볼 수 있다”고 판단함.

◆ **장기간 야간 교대 근무 근로자 동맥경화 위험성 높다** (뉴스1, 2월 4일)

- 강원양 화순전남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공의 (지도 교수 문재동)는 ‘화학공장 근로자에 있어서 관상동맥 CT 혈관 조영술을 통한 교대근무와 심혈관질환의 연관성’에 관한 연구논문을 직업의학·산업보건분야 권위 지인 ‘직업환경의학’ 최근호에 발표함.
- 강 전공의는 128채널 초고속CT를 이용해 장기간 야간 교대 근무한 근로자들의 심장영상을 연구한 결과, 동맥경화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입증함.
- 이 연구는 산업안전보건법 확대 실시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작된 야간작업자의 특수검진을 뒷받침하는 주요 자료로 활용될 예정임.

◆ **석면 사망자 향후 20년간 약 2,000명 예측**
(세계일보, 2월 15일)

- 경북대 김수영 교수팀의 분석 결과, 석면 관련 질환으로 인한 국내 사망자가 향후 20년간 약 2,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됨.
- 김 교수팀은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중피종·석면침착증 등 석면 관련 질환의 사망률을 산출하였으며, 그 결과 2036년까지 약 2,000명이 석면 관련 질환으로 숨지되 대부분은 중피종 환자일 것으로 추정함.
- 국내 중피종 사망자는 해마다 증가 추세이며 최근 5년간 (2009~2013년) 중피종 사망자는 총 268명으로 직전 5년 (2004~2008년)에 비해 45% 증가함.

<끝>.